

# “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 밝혀라”

### 민주 윤준병 의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원안대비 55% 변경 사실상 신규노선... 예타조사 거치지 않은 변경안은 국가재정법 위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정읍·고창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면서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려 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누가 왜, 뭘 위해서 국정농단을 하려 했는지 그 진상을 조속히 밝히고, 원희룡 장관 등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에 연루된 주범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준병 의원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를 덮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거짓말과 말 바꾸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본질은 바로 누가, 왜, 뭘 위해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변경안은 원안 대비 55% 넘게 변경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원안과 동일성을 상실한 사실상 신규 노선”이라며 “노선을 변경하

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새로 거쳐야 하지만, 변경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법치주의·건전재정을 외치지만, 정작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면서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려 했다”며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예산 1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

장관의 기자회견 말 한마디로 하루 아침에 백지화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더해 “사업 백지화 선언에 앞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는지 밝혀라”며 “민약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백지화 선언을 했다면 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를 누가, 왜, 뭘 위해서 국정농단을 하려 했는지 그 진상을 조속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재촉하는 한편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 게이트에 연루된 주범들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승=김대환 기자



13일 오전 10시 원주군 우석대학교 지역혁신센터에서 전북 도내 수소 관련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연 뒤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완주 ‘수소 실리콘밸리’ 조성 노·사·민·정 ‘손맞잡아’

### 전북 수소산업 협의회 발족... 첫 회의 열어 민주 안호영 의원 “규제 완화·국비 확보 주력”

전북지역 미래먹거리인 수소 경제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완주군에 ‘수소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국회·전북·완주·수소 관련 기업 및 공공 등이 한자리에 모여 수소산업 발전 기업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더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완주군을 세계 1등 ‘수소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위해 전북 도내 수소 관련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13일 오전 10시 완주군 우석대학교 지역혁신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수소산업 노·사·민·정 협의체에는 정치권을 대표해 안호영 의원, 유수봉 도의원,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이 참석했고, 행정에서는 유희태 완주군수, 이종훈 전북 에너지수소과장 및 이정근 완주군 미래전략담당관이 참석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현대자동차 임민규 공장장, 비너텍 정한기 사장, 이엔지로봇장 권용기 대표, 정우정공 여시락 부사장, 에테르티 전산장 상무, 테라릭스 김태영 대표, 에이아에스텍 전재홍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민간 대표로 이흥기 우석대 교수와 이종희 전북대 교수가 참여했고, 자동차융합기술원 노윤식 단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심규홍 부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정진수 센터장, 전북테크노파크 김영권 단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유석실장 등 수소 관련 공공기관도 함께 하였다.

이날 회의는 올해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소상용차 실차 기반 신뢰 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에

대해 자동차융합기술원 노윤식 단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완주군에서 수소특화산업단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이후 전북도내 수소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3월 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면서 완주군이 대한민국 수소 경제 1번지가 되었다”며 “전북을 넘어 세계 1등 수소산업 전진기지가 자 수소 실리콘밸리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고 수소산업 관련 노·사·민·정 힘을 모아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 취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수소 관련 노사민정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수소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완주군을 ‘수소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위해, 규제 완화 및 국비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반드시 국회에서 해결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 성공적 유치의 비답엔 현대자동차와 수소 관련 기업들의 도움이 매우 컸다”라며 “앞으로도 수소 관련 기업들과 소통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완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안호영 의원은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완주군을 수소 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수소 경제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고, ‘수소산업 노·사·민·정 협의체’는 상설화해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방부장

###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최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가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52회 임시회를 열고 군의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한다.

이번 회기를 통해 군의회는 연초 계획하였던 각종 군정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군의 중·장기적인 계획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스마트농업 지원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최한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우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또한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남수 의원, 부위원장으로 최한주 의원을 선임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경자 의원, 부위원장으로 김광훈 의원을 각각 선임했음을 보고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13일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한 정창근 농식품부장관과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민간위원 등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 위원들이 전북 스마트 농업의 현장을 살펴보고 청년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는 대화의 시간을 갖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 도의회 임시회 오늘 개최

### 24일까지 의정활동... 내년 1월 전북특자도 출범 특자도 추진단 특례 반영 활동 등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는 14일 제402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11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의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한 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먼저, 14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등 주요 의제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태권도원 활성화

위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 및 관련 단체 이진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며 도민과의 소통 등 민생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의정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특히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신설된 ‘특별자치도 추진단’의 특례 반영 활동과 출범 준비사항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이어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등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국주영은 의장은 “제12대 의회 출범 2년 차는 지역 숙원사업 해결과 도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심전력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해 전북발전과 도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훈 기자

### 고창군의회 임시회 마무리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13일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제30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임시회 첫날인 7월 5일 본회의에서 새롭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원장에 박성만 의원, 부위원장에 차남준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물체 날인 6일부터는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5일 동안 부서별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으며,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의안심사에 있어 본회의 소관의 결의안 2건과 상임위원회 소관의 12건 등 총 14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임정호 의장은 “회기 동안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의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과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관련 부서들 간의 협업을 통해 시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3일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임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계획 안전성 확보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고창군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강력 규탄 △정부와 한수원의 일방적인 원전관련 계획은 고창군의회와 고창군을 무시하는 처사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것 △노후 원전 수명연장은 군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주민동의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고창=김정석 기자

## 장마 대처상황 점검·공동대응체계 구축 논의

### 임상규 행정부지사 주재 장마철 호우 대책회의

전북도는 6월 말부터 지속된 장맛비로 인한 대처상황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임상규 행정부지사 주재로 장마철 호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협업부서가 참석했으며, 14개 시군에서 도 각 부단체장이 영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호우로 인한 대처상황을 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하고 추후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인력·장비 등 가용 가능한 자원 투입 및 지원 등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으니, 하천변 산책로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장소는 사전통제를 적극 실시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도민께서는 집중 호우 시, 야외 캠핑 및 계곡 어영



전북도는 6월 말부터 지속된 장맛비로 인한 대처상황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임상규 행정부지사 주재로 장마철 호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등을 자제하시고 산사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땅울림, 물 솟아오름 등 전조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해기간에 돌입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자연재난 예비특보 단계부터 선제적인 상황관단회의를 통해 상시대비, 초

기대용, 비상1·2·3단계(재난부서+관계부서+유관기관) 등 5단계 재난대응 체계를 운용 중이다.

더불어 기상청에서는 15일까지 도내 100~250mm(많은 곳 400mm)의 강한 비를 예보함에 따라 가용 가능한 재원을 투입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尹정부 추진 도내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근거 마련

### 김정기 도의원, 조례 대표발의... 도내 농수산물 이용 촉진 목적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군)이 전북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40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 제공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네트워크에서 민생조례로 선정하여 전남에 이어 전국 광역의회에서 두 번째로 제정하게 된 것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전라북도 아침식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과 민속도 등 실제조사를 실시하고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아침식사 하기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한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

조례를 대표로 발의한 김정기 의원은 “늦서 조례를 제정한 전라남도의 경우 대학생만을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전북도의회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기존 대학생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까지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며, “아침식사 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도내 쌀소비량 증대 및 농수산물 이용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아침식사 하기 문화 조성으로 도민의 건강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경우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